

행 정 법

2013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정부는 문화한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국회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일정규모의 문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문화시설의 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시설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가상의 법률임.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였고, 특례법은 2012.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A도(道)의 B군수는 A도로부터 A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된 관내 C아파트를 분양받은 甲에 대하여 2012. 2. 26.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처분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3. 3. 31.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문화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이 이미 납부한 문화시설 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받고자 한다.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과 그 승소 가능성은? (40점)

<참조조문>

문화시설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가상의 법률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도지사는 문화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임)

-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 문. 甲은 1995. 1. 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다. 甲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甲이 위 사안으로 2011. 7.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3. 4. 9. 퇴직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甲이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 각종 처분을 하여 왔는데, 그 처분의 효력은? (20점)
- 2) 甲이 위 사안으로 2011. 7. 5. 무죄 선고를 받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3. 4. 9.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징계시효 및 제소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함) (10점)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 3 문. 甲은 A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A시장은 해당지역이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일반 여론에서도 보존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A시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사전통지가 없었으며 이유제시 또한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한다. 이러한 甲의 주장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시오. (30점)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

